



**쌀 직불금 부당 신청 실태와
실경작자 직불금 보호를
위한 근본적인 대안은?**



1. 직불금 부당 수령 규모는 얼마인가?

- 감사원이 지난해 3월21일부터 5월15일까지 감사를 통해 파악한 결과를 보면, 2006년산 쌀 직불금 수령자 99만800여명 중 17만3947명이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부당 수령 받았다. 이에 따라 부당 신청 해 지급된 직불금 규모는 1,683억원이다.
- 그러나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가 부당신청 사실을 적발해 거둬들인 금액은 4억 5,651만원에 불과해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.
- 이처럼 현장 농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생산비 폭등으로 고통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공직자들마저 직불금을 편취했기 때문이다. 실제, 쌀 직불금을 수령한 공직자는 이봉화 차관 등 공무원이 4만421명, 공기업 임직원이 6,213명에 이르고 있다.



2. 직불금 부정 수급 어떻게 이뤄지나?

- 부동산 투기꾼들이 위장 전입을 통해 농지를 구입 후 일선 농가에게 농지를 임대하고 실경작 증명을 위해 직불금을 지주가 수령하게 된다. 만약, 실경작자인 농민이 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농지 임대를 파기하고 제3자에게 농지를 임대하기 때문에 신고를 엄두내지 못하고 있다.
- 또한,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을 신청하게 하되, 지주는 소작료를 직불금 금액만큼 상승시켜 직불금을 편취하고 있기도 하다.



3. 부재지주가 직불금을 부당하게 신청하는 이유는 무엇인가?

- 부재지주들이 직불금을 신청하는 것은 8년 이상 자경 할 경우 양도소득세 60% 중과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. 특히 8년 이상 자경 한 농민은 1억원 한도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경을 증명하는 직불금이 투기꾼들에게 표적이 되고 있다.

- 실제 지난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건수 및 세액은 8만2천665건, 1조5천825 억원으로 직불금 제도가 도입된 2005년 4만5천310건, 5천815억원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.



4. 쌀 직불금 실경작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은?

- 우선 정부에서도 실태조사를 하지만 영농 증명을 해준 마을이장에게 확인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습니다. 이에 직불금 수령자 가가호호 방문을 통한 일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.
- 둘째, 부재지주 직불금 신청자 명단을 공개해야한다. 정보 공개가 사생활 침해라는 논란이 있긴 하지만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된다면 이에 대한 우려와 부작용은 없을 것이다.
- 셋째, 농지 임대차를 일부 허용하되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를 하도록 해야한다.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 임대를 할 경우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이 지급이 가능하고 임차료 상승도 방지 할 수 있습니다. 단, 농지은행 임대인 경우 또 다른 편법을 막기 위해 자경 기간에서 제외토록 해야 한다.
- 넷째, 실경작자 확인 강화를 위해 면 단위로 면장-이장-농민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(가칭) '직불금 심사위원회' 를 구성해야 한다. 또한 실경작 증명을 발급해주는 마을책임자에게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되 부재지주 직불금 수령 적발시 마을책임자에게도 민형사상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.
- 마지막으로 농지는 농민만이 소유 할 수 있도록 농지소유제도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한다. 또한 비농민이 농지 거래를 통해 막대한 차익을 올렸다면 대만의 경우처럼 95% 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. 단, 농지소유 규제에 따라 재산권의 제약을 받는 만큼 농민의 보상책으로 직불금 지급 단가 상승 등 농가소득 확충을 위한 지원책이 마련해야 한다. ☞